'농업회생대책', 누구에게 기댈 수 있나?

농업정책연구소장
이헌목(李憲穆)

쌀협상안에 대한 국회비준과 쌀 대란문제를 처리하는 정부와 국회의 행태에 대해 농민들이 속을 끓이고 있다. 우리 농업회생대책을 먼저 세워달라는 농민들의 처절한 투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협상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누가 뭐라 해도 농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마지막 보루인 쌀을 이렇게 쉽게 개방하다니! 정부의 온갖 대책에도 쌀값은 한 가마 13만 원 선에서 움직이지도 않고...어디 쌀뿐인가? 연말이면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될 것이란 소문이 이미 파다하고, DDA협상에서는 겨우 100% 내외의 관세상한선이 얘기되고 있다. 무역입국을 위해 정부는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 무역상대국과 FTA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농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농민들의 분노와 좌절감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감지한 정부와 여당이 내년 2월까지 '우리 농업회생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 온 정부와 정치권의 사고방식과 태도에서 무슨 특별한 대책이 나오겠는가? 그들은 언제나 119조대책이 바로 우리 농업회생대책이라고 강변해 왔다. 우리 농업이 선진국수준으로 개방되는 최악의 경우를 전제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업계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대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추가로 할 일이 없는 것이다. '시끄럽게' 얘기하면 119조대책이라는 커다란 넝마주머니 속에 집어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한농연은 '우리 농업회생을 위한 대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10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방식은 지난번 쌀대책관련 20가지 요구대책과 비슷할 것이다. 이미 제1과제는 지나가 버렸고, 제2과제에 대해서도 "농특위도 있는데.."하며 한 발짝 빼고 있다. 대부분의 과제에 대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곤란하다고 하면서 애매하게 넘어갈 것이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의 생색을 낼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는 "정부는 최선을 다해 농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대책'을 세웠다"고 할 것이다. 농민들도 지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어떻게 되겠지" 하며 포기를 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책의 흐름과 농업계의 사고방식으로는 진짜 '우리 농업회생을 위한 대책'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119조 종합대책도 우리 농업을 살리고, 농민을 잘살게 하고, 농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만든 것이다. 농업계의 석학과 연구원과 농림공무원과 농민단체가 "참여"하여 시안을 만들고, 정부 내 협의는 물론 국회의 검증을 거쳐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한농연이 요구한 10대과제를 수용한다면 우리 농업이 회생될 수 있을 것인가? 정부의 태도로 보아 '요구대로' 수용하지도 않겠지만 '대체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농업이 회생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농업회생을 위해서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했던 코페르니쿠스처럼 기존의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는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떤 고난과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우리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만들고 실현해 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 농업을 회생시키는 대책이 아니면 제 아무리 '화려한' 대책도 우리 농민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제 누가 어떻게 이 강고한 '생각의 틀'을 깨고, 우리 농업을 회생시킬 것인가? 실망스럽게도(?) 결국엔 우리 농업의 주역인 한농연이 해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참고〉 한농연이 요구한 우리 농업회생을 위한 10대과제

1. 우리 농업의 근본 회생 및 쌀 대란 해소 대책이 없는 쌀 협상 국회비준 강행 즉각 중단
2. 농민단체-국회-정부 3자간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농업 회생 및 쌀 대란 해소 대책 즉각 수립
3. 각종 농업통상협상 추진시 농민 대표의 협상 참여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협상 전략 수립 및 대책 마련
4. 농업 · 농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
5.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실질적인 농가소득 지지가 가능토록 전면 개편하고, 밭농업직불제를 즉각 도입
6. 총체적 난맥상에 빠진 양곡 정책을 전면 개편하여 쌀값 보장 및 수급 안정 도모
7. 매년 3백만석 이상의 대북 쌀 지원을 법제화하여 통일농업의 기틀을 마련
8. 학교급식법 개정 및 지자체별 급식조례 재개정을 조속히 추진
9. 신규 정책자금 금리 1% 인하 및 상호금융 저리 대체자금 조건부 지원 조항을 삭제
10. 식품 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